



12면

문체부 예비문화도시 선정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음 10월 29일) 제291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2일 국회 소공동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 대선 공약에 담아야”

송하진 도지사,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개헌 강력 촉구
자치분권 개헌·양원제 도입 국회 2차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공동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을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시행방

안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경험을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

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협의체는 성명서 발표 후,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지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는 이혜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회장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개헌 논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2대 국회에서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대선에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지방분권국가의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K-방역을 완성시켜나간 것은 지방정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하진 회장은 “대한민국이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 OECD 전체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지사 인증상품 인증서 수여

농수산물 6·전통가공 13
공산품 2개 등 총 21개에
유효기간은 2024년까지

전북도가 지역 대표 상품 및 전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선정한 전북도지사인증상품 21개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전북도 정부부지사와 인증상품 선정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로 선정된 인증상품 21점도 함께 전시했다.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에서 매년 선정·관리하는 주요 시책 중 하나다. 도는 지난달 19일 선정관리위원회 최종 회의를 통해 농축수산물 분야 6개, 전통가공식품 분야 13개, 공산품 분야 2개 등 총 21개 상품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3개, 군산시 4개, 익산시 3개, 정읍시 2개, 남원시 2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군 4개 상품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인증마크 사용,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우대, 상설 상품관 입점 등을 지원받는다. 도는 품질검사 및 시설·위생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열쇠는 소비자와의 건전한 신뢰 형성이며, ‘도지사 인증상품 JB마크’가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살리기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

도교육청, 교육부 2020 회계연도 교육재정 분석 결과

전북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0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도지역 최우수 교육청에 뽑혔다. 이어 충북교육청이 우수, 강원교육청이 ‘장려’ 상을 받았다. 시도에서는 대전교육청(최우수), 부산교육청(우수), 울산교육청(장려) 순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경상적 지출 비율, 체납액 비율,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예산집행 비율, 이·불용액 비율(이월액 비율 3.15%/불용액 비율 1.47%),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법정부매비율 모두 달성)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교육청들

은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 상장 및 상패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보급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일부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선 노력을 기울인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정원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겨울 감성 이곳, 군산!
“군산에서 겨울 감성에 빠지다”

